기회 불평등의 공간적 접근과 균형발전 정책에의 시사점[1)]

정진영 부연구위원

요 약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회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회균등의 실현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공간적 불평등에 주목하여 기회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계소득 수준과 계층 분포의 불균등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개인의 성장 환경과 자원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지며,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성과로 전이되는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전국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가계소득의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부모 세대 소득 지위의 세대 간 전이가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은 기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중요한 배경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 국민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1. 들어가며

기회균등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세대에서 '기회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상할 정도다.[2] '수저론', '개천 용(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 등과 같은 사회적 담론에서도 드러나듯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경로를 결정짓는다는 인식은 현세대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균등을 공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회의 지리(Geography of Opportunity) 논의에서 지적하듯 공간은 불평등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4] 기회의 지리 개념은 자원의 불균등한 공간적 분포에 따라 개인 삶의 궤적과 성취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5] 공간적 격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결합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6]

본 연구는 기회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강화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회 불평등에 주목한다. 우선 가계소득으로 표상되는 기회 불평등의 차이를 살펴본다. 가계소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격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나아가 공간이 불평등의 세대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위계층일수록 교육, 주거, 고용 등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공간적 우위는 자녀 세대의 기회와 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 불균등성이 세대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부모의 가난이나 부가 자녀에 대물림되는 정도가 성장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로 대표되는 불균형 발전이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논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이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로임을 주장한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계소득 격차

일자리, 교육,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자원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기회의 차이로 이어진다. 본 장에서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가 가구의 경제적 성과

로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계소득 격차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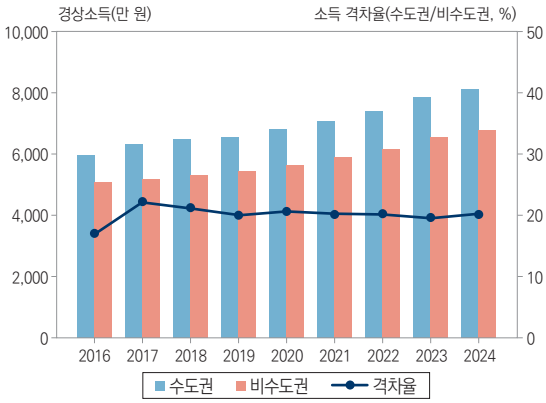
〈그림 1〉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상소득의 절대적 격차는 2019년[7] 이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수도권 가구와 비수도권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 격차는 약 1,089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36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이 비수도권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양 지역 간 소득 규모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었다. 다만 지역 간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제시하는 소득 격차율[8]은 같은 기간 20% 내외에서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근로소득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연간 평균 근로소득 차이는 2019년 1,013만 원에서 2024년 1,46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소득 격차율 역시 2019년 30.7%에서 2024년 36.4%로 상승하였다. 경상소득의 격차율이 20% 내외에서 유지된 것과 달리 근로소득에서는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차이가 모두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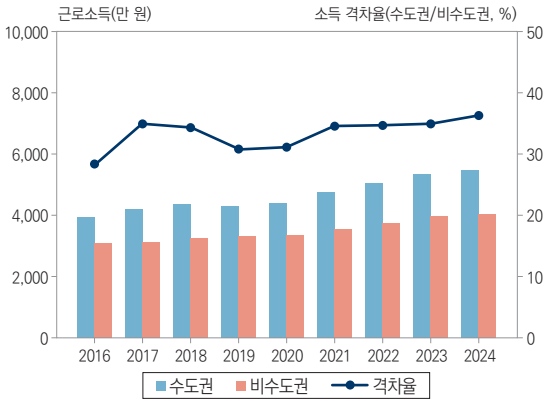
경상소득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의 격차 확대 폭과 격차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 간 소득 차이가 노동시장의 차이와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은 양질의 일자리, 고임금 산업의 집중 등을 통해 더 높은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제한된 고부가가치 일자리 구조에 놓여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는 평균 소득의 차이뿐 아니라 소득계층 구성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소득은 지역 간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지만, 특정 소득계층이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지역별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수도권·비수도권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 추이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가구의 연간 평균 근로소득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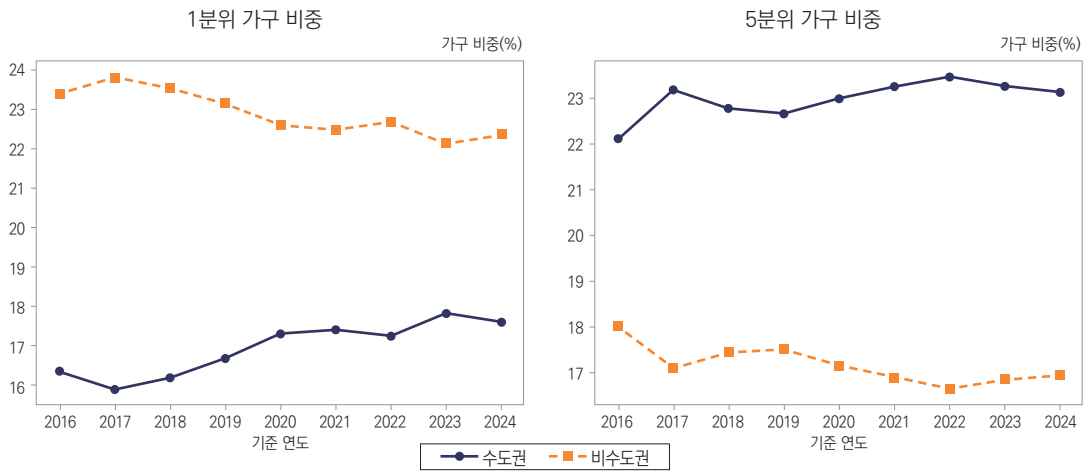
〈그림 3〉은 1분위와 5분위 가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어떻게 분포하는지와 그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1분위 가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시간에 따라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6년 수도권의 1분위 가구 비중은 16.35%였고, 비수도권은 23.38%로 나타났다. 이후 2024년에는 수도권 17.59%, 비수도권 22.35%로 변화하면서 양 지역 간 차이가 7.03%포인트에서 4.76%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비중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5분위 가구 비중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 또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 2016년 수도권의 5분위 가구 비중은 22.11%였고, 비수도권은 18.05%로 양 지역 간 차이는 4.06%포인트였다. 이후 2022년에는 수도권 23.46%, 비수도권 16.64%로 격차가 6.82%포인트까지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6.15%포인트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반면, 5분위 가구는 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5분위 가구의 수도권 집중은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해 202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어 고소득층의 공간적 편중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에는 약 1,500만 원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며, 소득계층의 공간적 분포에서도 고소득층은 수도권에 저소득층은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가 가계소득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가계소득의 격차가 공간을 매개하여 세대로 전이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그림 3〉 소득 1분위·5분위 가구의 수도권·비수도권 분포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모-자녀 소득 연관성의 차이

다음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성장 지역이 개인의 성인기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가난이나 부가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정도는 자녀의 성장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계 수준의 경제적 조건이 지역 수준의 기회 구조와 결합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1~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 분석과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KLIPS의 개인 자료에서 임금, 만 나이, 성장지역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가구 고유번호(HHID)를 통해 가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결합하였다.[9)]

(1) 이행행렬 분석

이행행렬을 통해 가구소득을 5분위로 구성하여 부모에서 자녀로 소득분위[10)]가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확인하였다.

표본의 부모-자식 간 소득분위 이행행렬인 〈표 2〉를 살펴보면, 특히 부모가 저소득 분위에 속할수록 부모소득과 자녀소득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소득 1분위에 속할 경우 자녀의 절반 이상이 소득 1~2분위에 머물렀다. 이는 부모가 소득 5분위에 속할 경우 자녀 또한 소득 4~5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부모보다 자녀 분위가 낮은 하방이동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하방이동 비율은 약 42.2%, 상방이동 비율은 약 34.4%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성장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수도권 거주 표본이 적은 관계로 논의에 제한이 있으나[11)],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소득이동성이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분위, 5분위 소득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향을 통해 뒷받침된다. 수도권에서는 부모가 소득 1분위일 때 자녀 역시 1분위에 머무는 비율이 50%에 이르렀으며, 상위 5분위 부모의 사례에서도 자녀의

〈표 1〉 부모소득과 자녀소득 간 이행행렬(전체 표본)

단위: 가구 수, (%)

부모 \ 자녀	1	2	3	4	5
1	30 (30.9)	24 (24.7)	18 (18.6)	12 (12.4)	13 (13.4)
2	44 (26.0)	32 (18.9)	27 (16.0)	31 (18.3)	35 (20.7)
3	8 (14.5)	8 (14.5)	18 (32.7)	10 (18.2)	11 (20.0)
4	23 (17.2)	31 (23.1)	30 (22.4)	29 (21.6)	21 (15.7)
5	27 (20.3)	24 (18.0)	29 (21.8)	24 (18.0)	29 (21.8)

자료: KLIP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부모소득과 자녀소득 간 이행행렬(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단위: 가구 수, (%)

부모 \ 자녀	비수도권					수도권				
	1	2	3	4	5	1	2	3	4	5
1	22 (27.2)	21 (25.9)	15 (18.5)	11 (13.6)	12 (14.8)	8 (50.0)	3 (18.8)	3 (18.8)	1 (6.2)	1 (6.2)
2	37 (28.5)	25 (19.2)	17 (13.1)	23 (17.7)	28 (21.5)	7 (17.9)	7 (17.9)	10 (25.6)	8 (20.5)	7 (17.9)
3	6 (15.0)	8 (20.0)	12 (30.0)	7 (17.5)	7 (17.5)	2 (13.3)	0 (0.0)	6 (40.0)	3 (20.0)	4 (26.7)
4	14 (14.9)	22 (23.4)	24 (25.5)	22 (23.4)	12 (12.8)	9 (22.5)	9 (22.5)	6 (15.0)	7 (17.5)	9 (22.5)
5	20 (22.5)	19 (21.3)	22 (24.7)	15 (16.9)	13 (14.6)	7 (15.9)	5 (11.4)	7 (15.9)	9 (20.5)	16 (36.4)

자료: KLIP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6.4%가 동일한 5분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각각 27.2%, 14.6%에 그친 비수도권 성장 자녀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표 2〉에서 고소득층의 소득 이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표 3〉의 수도권 이행행렬에서는 5분위 부모의 소득 이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특징적이다.

이행행렬을 통해 세대 간 소득의 상관성이 존재하며, 성장 지역에 따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표본에서는 저소득층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 상당 부분 이전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자녀의 성장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도권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부모와 자녀 간 동일 분위 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에서의 소득 수준 이전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던 전체 표본 및 비수도권 표본 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다.

(2) 패널 회귀분석

성장 지역과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성인기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간주하고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 i의 근로소득(로그값)이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i 부모의 근로소득 수준, i의 수도권 성장 여부(더미),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부모 근로소득 변수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수도권 성장 여부를 통해서는 성장 지역 특성이 성인기 경제 성과에 미치는 '수도권 프리미엄'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상호작용항을 통해 수도권 프리미엄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성장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본 구성에는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

〈표 3〉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녀 근로소득(만 원)	362.77	187.57	19.23	4,384.05
자녀 근로소득(ln)	5.71	0.52	2.71	8.14
부모 근로소득(만 원)	205.15	150.09	16.95	1,958.93
부모 근로소득(ln)	5.14	0.61	2.83	7.58
수도권 성장	0.24	0.43	0	1
자녀 만나이	38.66	6.59	21	63
자녀 만나이(제곱)	1,538.21	525.35	441	3,969
부모 만나이	49.07	7.67	22	64
부모 만나이(제곱)	2,467.04	716.89	484	4,096
대학 진학 여부	0.73	0.44	0	1

자료: KLIP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소득액 관련 문항은 '(주된일자리)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만)'과 '(주된일자리) 비임금근로자-월평균소득(만)'을 활용, 성장 지역은 노동패널 개인문항 중 '만 14세 성장지'에 대한 답변을 활용.

였다. 이는 출생 코호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고려할 때 197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들의 세대 간 사회이동 패턴은 이전 코호트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출생 연도에 따라 두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였다. 코호트 1은 출생 연도가 1960년부터 1974년까지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코호트 2는 출생 연도가 1975년부터 1999년까지인 자녀에 한정하였다. 1975년 전후의 구분은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라는 일반적 구분을 참고하였다.[13]

〈표 4〉에서는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모형의 경우 모형 1에서 수도권 성장 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모형 2에서 수도권 성장 여부와 부모 근로소득의 상호작용항이 0.05 수준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이전되는 양상이 수도권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함의한다.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코호트 1과 2의 분석 결과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1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의 근로소득과 수도권 성장 여부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시기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수도권에서의 성장 경험이 미래 소득의 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2의 분석 결과는 이와 차이를 보였다. 모형 1에서 부모 근로소득과 수도권 성장 여부 각각은 자녀의 근로소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후기 코호트로 올수록 부모의 소득 수준과 수도권에서의 거주 경험이 자녀의 성인기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코호트 2의 경우 모형 2에서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

〈표 4〉 부모 근로소득 및 수도권 성장 여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코호트 1 (1960~1974)		코호트 2 (1975~1999)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부모 근로소득		0.0883** (0.0293)	0.0561* (0.0316)	0.0662 (0.0464)	0.0512 (0.0517)	0.0646** (0.0312)	0.0327 (0.0328)
수도권 성장		0.0486 (0.0408)	−0.7947** (0.3597)	−0.0414 (0.0785)	−0.3501 (0.4917)	0.0897** (0.0403)	−0.9083* (0.4650)
부모 근로소득 X 수도권 성장			0.1590** (0.0678)		0.0595 (0.0971)		0.1862** (0.0863)
만나이		0.1337*** (0.0133)	0.1337*** (0.0133)	0.1622*** (0.0210)	0.1623*** (0.0210)	0.1299*** (0.0226)	0.1297*** (0.0226)
만나이(제곱)		−0.0011*** (0.0002)	−0.0011*** (0.0002)	−0.0014*** (0.0003)	−0.0014*** (0.0003)	−0.0011** (0.0003)	−0.0011** (0.0003)
부모 만나이		0.0221 (0.0221)	0.0219 (0.0222)	0.0439 (0.0301)	0.0440 (0.0302)	−0.0641** (0.0248)	−0.0659** (0.0245)
부모 만나이(제곱)		−0.0003 (0.0002)	−0.0003 (0.0002)	−0.0005 (0.0004)	−0.0005 (0.0004)	0.0006** (0.0003)	0.0006** (0.0003)
대학 진학		0.3012*** (0.0587)	0.3016*** (0.0584)	0.3371*** (0.0893)	0.3365*** (0.0895)	0.1590** (0.0472)	0.1649** (0.0478)
상수		1.2604** (0.0587)	1.4359** (0.5414)	−0.1812 (0.6465)	−0.1069 (0.6732)	3.6471*** (0.6614)	3.8565*** (0.6632)
N(groups)		5,496 (588)	5,496 (588)	2,628 (189)	2,628 (189)	2,868 (399)	2,868 (399)
R2	Within	0.4911	0.4911	0.5012	0.5012	0.4783	0.4782
	Between	0.1606	0.1665	0.3148	0.3154	0.1937	0.2038
	Overall	0.2641	0.2681	0.3288	0.3307	0.3097	0.3113

자료: KLIP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 **, *는 추정치가 각각 1%, 5%,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표준오차는 동일기업을 대상으로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분석을 적용하여 조정.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부모 소득 및 수도권 성장의 프리미엄이 상호 강화됨을 함의한다. 부모 소득의 효과가 자녀의 수도권 성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혹은 수도권 성장의 프리미엄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수도권 성장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1975년 이후 출생 세대에서 수도권 프리미엄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하게 수도권에서 성장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누리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이 자원이 밀집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프리미엄이 부모 소득과 결합하여 작용하는 구조는 지역 격차가 기회 불평등의 강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코호트 간의 차이는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상승 이동의 속도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선행연구[14]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1975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사회이동 양상은 이전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이들의 근로소득이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15]와 유사한 결과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관련이 있다. 1975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또한 해당 시기에 출생한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사교육의 허용과 특목고의 확대 등 교육 경쟁이 심화한 환경에 놓였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 불안정,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 증대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였다.[16]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더 제한된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선별된 기회를 얻는 개인은 대체로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교육적·경제적 자원을 누렸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은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성장했거나,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두 조건은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하며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4. 시사점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와 달리, 기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17]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회 불평등에 관한 비관적 인식이 확대된 하나의 이유로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제시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수준 및 계층 분포의 불균등성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단위의 평균적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격차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공간은 현재의 경제적 격차가 다음 세대의 기회 차이로 이어지는 경로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지역 간 격차는 성장 지역에 따른 세대 간 이동성의 차이와 결합하면서, 기회 불평등이 현세대의 소득 격차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이·고착화된다. 이때 공간은 단순히 불평등이 나타나는 배경이 아니라, 경제적 격차를 기회의 차이로 전환하고 이를 지속·고착화하는 매개다.

종합하면 최근 공정한 기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심화는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자원과 기회의 문제다. 이러한 현실은 '수저론'과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오늘날 청년 세대의 기회 불평등 및 공정성 담론이 꾸준히

확산·심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균형발전정책은 기회의 균등 보장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사회구성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질적 평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자리한다.

핵심 주제어: 기회균등, 기회의 지리(Opportunity of geography), 균형발전



정진영
지역성장연구실 부연구위원
wlsdud@kiet.re.kr / 044-287-3715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가치와 핵심 정책의제」(공저, 2025)
「국내 임차공장 현황과 입지 유형별 특성」(2025)

1) 유이선 외(2025),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적 가치와 핵심 정책의제」(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요약 및 수정하였다.
2) 박원익·조윤호(2019), 「공정하지 않다: 90년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지와인;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율(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7, pp. 12-59.
3) 여유진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25.
4) Galster, G. and Sharkey, P(2017), "Spatial foundations of inequality: A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overview",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3(2), pp. 1-33.
5) 이승욱·박철웅·강승범(2023), "도시불평등과 기회의 지리", 「공간과 사회」, 85, pp. 285-320.
6) Florida, R(2017), *The new urban crisis: Gentrification, housing bubbles, growing inequality, and what we can do about it*, Simon and Schuster.
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관련 항목이 조사 전년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조사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8) 소득 격차율=(수도권 평균소득/비수도권 평균소득-1)×100
9) 분석 대상 자녀는 1960~1999년 출생자로 한정하였다. 부모 관측치는 자녀의 분가 이전 시점에 관측된 자료만 결합하였으며, 부모의 출생 연도가 1980년 이후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 조사 시점 기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주로 제한하였다. 이 밖에 소득 이동성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관측치와 주요 변수의 무응답·결측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0) 개체의 관측연도 전체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11) 표본 588명 중 434명은 비수도권에서, 154명은 수도권에서 성장하였다.
12) 계봉오·황선재(2016),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pp. 1-28.
13) 여유진(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pp. 61-81.
14) 계봉오·황선재(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pp. 1-28.
15) 여유진(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pp. 61-81.
16)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 487-521.
17) 이병훈(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pp. 157-179.